

한라포커스 '100% 전기차 전환' 제주, 목표 달성 문제 없나(상)

보급부터 '빨간불'... 과제도 산적

당초 계획 대비 보급 저조... 보조금도 매년 줄어 내연기관 차량 규제로 연관사업체 폐업 우려 상존 전문가 "보급만이 아닌 소비자 이용 편의 고려해야"

제주특별자치도가 2030년까지 도내 운행 차량을 친환경 전기차로 일괄 대체하겠다는 계획을 추진 중인 가운데, 매년 달성 목표를 줄이면서 선연적 의미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울러 보급 위주의 정책 추진에 따른 기존산업과의 상생 등 축적된 과제도 만만치 않다.

제주자치도는 2011년 전기차 선도시 지정을 시작으로 탄소 없는 섬 제주 전기차 시범도시 기본계획을 마련, 2013년부터 전기차 민간 보급을 시작했다. 지난해엔 2030년부터 내연기관 차량 신규 등록을 중단한다며 '제주형 뉴딜 종합계획'도 발표했다.

하지만 이같은 도의 정책 방향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비등하다.

우선 당초 계획 대비 보급 실적부터 미흡한 실정이다.

지난해 연말 기준 전기차 누적 보급 대수는 중장기 계획 상 목표보다 1만142대 미달된 2만1285대다. 올해엔 목표보다 7525대 줄어든 4292대로 공고됐다. 누적 보급 대수 계획

역시 당초 대비 1만9639대가 미달된 2만4605대로 줄었다. 내년의 경우 목표 대수에서 58.5% 가량 줄어든 6377대(누적 2만9804대)로 잡고 보급을 추진한다.

소비자들이 지원 받는 보조금 액수도 1800만원에서 1400만원, 1320만원, 올해 1250만원으로 매해 줄고 있다.

소비자들의 전기차 소비 욕구를 뒷받침할 수 있는 보급·생산 체계가 미흡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전기차 보조금 혜택을 받아 차량을 구매하기 위해선 사전 계약 후 출고 순서가 올 때까지 기다린 뒤 차량이 배정되면 인도일을 설정하고 보조금을 신청한다. 매년 줄어드는 보조금 혜택을 받기 위해 소비자들은 하루라도 빨리 계약하려 하지만, 차량을 인도받기도 전에 보조금이 소진되거나 보조금을 받기 위해 1년 넘게 대기하는 사례도 생겨나고 있다.

전기차 보급 확산에 따라 자동차 정비업체 등 관련업체 폐업도 예상되면서 정책 보완도 요구되고 있

다. 내연기관 차량 판매 금지 이상의 규제 없이는 목표 달성이 사실상 어렵기 때문이다.

지난해 에너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전기차 보급 확산에 따른 기존산업과 상생협력 실행방안 연구'에 따르면 2030년 전기차 100% 전환 시 도내 주유소 193곳 가운데 180곳이 폐업한다. 종합정비소는 92곳에서 21곳으로 줄고, 전문정비소는 기존 388곳 모두 폐업 길에 들어선다. 연관 산업 업체 1곳당 피해 규모는 주유소 23억원, LPG 충전소 21억원, 종합정비소 6억9000만원, 전문정비소 1억2000만원 등이다.

자동차 정비업계 관계자는 "폐업 시 주유소, LPG 충전소 등은 에너지관리법에 따라 업체 내 저장된 저장고 등을 들어내야 하는 데, 이 경우 2억~3억 가량이 소요되는 등 비용이 만만찮다"고 말했다.

송규진 전 제주연구소장은 "제주 전기차 보급 정책 추진에 있어, 업종 전환에 따른 폐업 보상금 등 실제적인 대안과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며 "보급에만 급급할 게 아니라 이용자들의 편의를 높이기 위한 체계를 마련해 지속적인 선순환으로 이어지도록 정책을 촘촘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다혜기자 dhkana@ihalla.com



후쿠시마 오염수가 담겨있는 탱크 일본 정부는 13일 오전 도쿄 총리관저에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후쿠시마(福島) 제1원전 사고로 발생한 다량의 방사성 물질 오염수를 바다에 배출하기로 결정했다. 사진은 지난 2월 13일에 촬영한 후쿠시마 제1원전의 오염수 탱크. 연합뉴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는 폭거”

日, 원전사고 이후 보관 중인 오염수 방출 결정 원 지사 13일 국회서 기자회견 강력 대응 시사 정부 “강한 유감... 필요한 모든 조치 다할 것”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방사성 물질 오염수를 해양에 방출하기로 결정하면서 제주를 비롯한 우리나라 해역이 직·간접적으로 오염수에 노출될 우려에 처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일본에 대한 강력 대응을 시사하고 나섰다.

▶▶관련기사 5면

일본 정부는 13일 지난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발전소 부지 내에 보관 중이던 방사성 물질 오염수를 해양으로 방출하겠다는 방침을 결정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저장하고 있는 지상의 저장탱크가 내년 가을쯤 부족해져 더 이상 보관이 어렵다는 것이 그 이유다.

정부는 이날 일본의 결정을 강력 비판하면서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 정보와 과정에 대한 국제적 감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긴급 관계 부처 회의를 가진 뒤 브리핑에서 “우리 국민에게 조금이라도 위해

가 되는 행위는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며 “일본정부에 대해 관련 정보를 면서 제주를 비롯한 우리나라 해역이 직·간접적으로 오염수에 노출될 우려에 처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일본에 대한 강력 대응을 시사했다.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염수 방류 결정은 바다를 공유한 인접국과 국민들에 대한 폭거”라며 일본 정부를 대상으로 강력 대응을 시사했다.

원 지사는 “우리의 긴급하고 정당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가 일방적 방류를 결정한다면 최후의 수단으로 법적 대응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원 지사는 “일본 정부는 자국민뿐만 아니라 한국과 중국 등 인접국들과 해당 국민들에게 오염수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공유할 의무를 지니고 있다”면서 “오염수 처리방식에 대

한 최종결정 또한 인접 국가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 정부는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은 채 모든 필요 절차를 생략하고 방류를 강행하기로 결정했다. 이제 말이 아닌 행동할 때가 됐다”면서 “제주 주재 일본 총영사를 조치(招致)하고, 일본 대사와 면담을 통해 강력한 항의를 전달하겠다”고 피력했다.

또한 “제주를 비롯한 부산과 경남, 울산, 전남까지 5개 지자체가 오염수 저지 대책위를 구성해 강력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시작하겠다”면서 “내일부터 당장 전문가들과 논의해 국제법과 국내법상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우리 정부도 ‘유감표명’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며 “5인의 유엔 특별보고관들도 지난달 11일 오염수의 태평양 방류 추진은 ‘환경 및 인권에 중대한 위험’이라는 성명을 일본 정부에 전달한 바 있다”며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국회·부미현기자

제주 코로나19 확진 663(0)
 13일 17시 기준

본사 사령

- ▶ 위촉
 - ▷ 논설실장 김병준
 - ▶ 승진
 - ▷ 편집국장 조상윤
 - ▷ 광고국장 고창익
 - ▷ 독자지원국장 김정훈
 - ▷ 편집국 부국장 진선희·문미숙
 - ▷ 광고국 부국장 강창권
 - ▷ 편집국 차장 이태윤·박소정
 - ▷ 광고국 차장 한민희
- 2021년 4월 13일자

14~15일 제주특별법 전부 개정 과제 토론회

대통령 직속 분권발전위 등 참석 제주도의회가 제주특별법 전부 개정 과제를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를 이틀간 연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특별법 전부개정 태스크포스(단장 이상봉 행정자치위원회)는 14~15일 이틀간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각 분야 정책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제주특별법 주요 쟁점과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토론회는 3개 세션으로 나눠 진행된다.

1세션은 ‘특별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자치입법·재정권 확보’를 주제로, 2세션에서는 ‘도민복지 증진을 위한 산업발전 및 균형발전’을 주제로 발표가 이어진다. 3세션에서는 1·2세션에서 나온 쟁점을 토대로 논의가 이뤄진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웰니스 관광
서귀포에서 건강과 치유의 길을 찾다!

순
명
상
치
유
체
험

서귀포시

건강과 힐링을 통한 여행의 즐거움,
서귀포에서 만나세요.

가족과 함께 느끼는 제주의 봄길 '가족추천코스' 녹산로 유채꽃(드라이브) → 조랑말체험공원 → 유채꽃프라자 → 성읍민속마을 → 표선해수욕장